



범죄기사와 2차 피해



지난 1월 중순 경기도 부천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3년 전에 터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을 뿐이다. 30대의 젊은 아버지는 10살이 채 안 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모자라 아들의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했다.

이번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특히 쏠리는 이유는 살인 자체보다 시신훼손에 있는 듯하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살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강력범죄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상당수의 언론이 시신훼손에 주목하여 이번 사건을 아예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라 명명하고 있다. 아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패륜적이지만 그 시신을 훼손한 후 집 안에 보관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신훼손이 살인만큼이나 심각해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과연 그럴까. 우리 형법에서 시신훼손은 '사체오욕죄'로 다뤄진다(형법 제159조). 사체오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사체오욕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와는 죄의 경중에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또, 사체오욕죄는 생명이라든가 건강, 명예, 재산과 같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그중에서도 장례 방해·분묘 발굴과 같은 신앙에 관한 죄 중 하나로 취급된다. 결국, 죄의 경중으로만 따지자면 이번 사건에서 시신훼손은 살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는 단순한 사실보도를 넘어선, 눈에 띄는 심층 분석기사도 있다. 한 중앙일간지에서 1면 톱으로 낸 <40개월... 누구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많은 매체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전 맥주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등 범행 재연을 태연히 했다는 등 감정적인 보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차분히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문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다만, 잘 쓴 기사에도 뜻밖에도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그 후 학교가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

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 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며 죽은 아이가 다녔던 학교와 담임교사의 무관심 내지는 부실대처의 문제를 지적한다. 물론, 기사 어디에도 학교나 담임교사의 입장은 게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 학교 측의 대처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문제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따랐지만 매뉴얼 자체가 부실했던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일 후자에 해당한다면 부실 대처로 인한 비난은 학교나 담임교사의 몫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고 일선 학교에 하달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받아야 할 것이다.

심각한 범죄가 터질 때마다 언론은 범죄행위 자체를 알리고 범죄자나 그에 관련한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입는 부당한 2차 피해는 없는지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2년 나주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이후 우리 언론계에서 범죄보도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사건 기사로 인해 몇몇 언론사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그 일부 책임이 인정되기까지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범행 관련 무수한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앞에서 언급한 학교나 담임교사의 피해 외에도 지나치게 자세한 범행 묘사라든가 죽은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자칫 또 다른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구속된 후 보호시설로 보내졌다는 딸아이가 언젠가는 이번 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될 텐데 언론에 문제자로 그려진 자기 오빠나 악마처럼 묘사된 부모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일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범죄 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이유라는 점이다.

